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80회 제1차 정례회

심 사 보 고 서



2021. 6.

복지문화위원회

Ⅰ 목 차 Ⅰ

1.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
2.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... 4
3.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... 6
4.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
5.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... 12

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9.

북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외 6인(박정환, 김화덕, 안대국, 홍복조, 김태형, 정창근)
- 발의일자: 2021. 1. 7.
- 회부일자: 2021. 1. 15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북지문화위원회(2021. 6. 9.)

2. 제정이유

달서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평생학습관 설치, 기능, 이용대상(안 제3조~안 제5조)
- 다.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(안 제6조)
- 라. 평생학습관 시설 일부 사용허가(안 제8조)
- 마.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, 감면, 반환(안 제10조~안 제12조)
- 바.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(안 제13조)
- 사. 평생교육실무협의회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1. 7. ~ 2021. 1. 19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조례안은 달서구 차원에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관 (이하 '학습관')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서 동 학습관의 설치 및 그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- 그러나 조례를 시행하면, 그 시행일부터 조례 효력(效力)이 발생하여 집행부는 관련 행정을 바로 펼쳐야 함에도, 본 조례 시행에 필수적인 학습관이라는 시설(館)의 성격(일례로 학습관 규모/관내 세부 배치 시설/사용 가능일 등)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집행부가 행정을 바로 펼칠 수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, 본 제정조례안 개별 조문에 대한 심의와는 별개로, 현 시점에서는 조례 제정 적절성 여부까지 포함하여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.

□ <부칙> 조문 및 <별표> 조문에 대해

- 학습관 내, 집행부가 설치하려는 세부시설이 확정적(確定的)이지 않음에도 안 [별표 1]에서 세부 시설로서 “강당·강의실”을 의원 발의로 미리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 수준까지 규정한 점. 다음으로 조례안 부칙에서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”토록 규정한 점은 집행부가 향후 조례를 시행함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 사항(예 : 배치할 시설/사용료 기준 / 실제 시행 가능일 등)에 대하여 의회가 ‘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(관여)하여’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배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.

□ 기타 사항

- 1) 안 제14조 “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관련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.”에 대해
 - 본 조례 핵심 시설 운영에 대해 본 조례가 아닌, 타(他) 조례에 그 성격이 규정된 <평생교육실무협의회>와 협의토록 권한을 부여함이 적절한지? 설령 권한을 부여하려 하더라도 안과 같은 방식으로 조문을 규정함이 입안 형식상 적절한지?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.
- 2)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가능함에도 학습관의 기능(안 제4조)에는 상위법령 제21조에서 규정한 학습관 기능 중 ‘동(洞)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’를 누락한 바,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.
- 3) 자치법규를 새로이 마련하게 되면 그 시행에 있어 관련 예산 수반이 필수적임. 따라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<비용추계서>를 제출받은 후, 조례안 심의를 함이 적절한 바,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